

미국의 안보실행전략


이 동 선
고려대학교

2009년 12월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지식 네트워크

동아시아연구원(The East Asia Institute: EAI)은
2002년 5월 설립된 민간 연구기관입니다.
EAI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개방된 사회를 발전시킴으로써 평화로운 국제 사회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연구를 통한 정책 제안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EAI는 정책 이슈에 관하여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EAI가 발행하는 보고서와 저널 및 단행본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를 밝힙니다.

 EAI는 등록된 고유의 트레이드마크입니다.

© 2009 EAI

EAI에서 발행되는 전자출판물은
오로지 비영리적 목적을 위해서만 제공됩니다.
또한 내용의 수정을 허용하지 않으며
온전한 형태로 사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어떠한 상업적 목적을 위한 복사와 출판은 엄격히 금지합니다.
EAI 웹사이트가 아닌 다른 곳에 본 출판물을 게시할 시에는
사전에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AI의 모든 출판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 받습니다.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서울 중구 을지로4가 310-68 삼풍빌딩 909호
Tel. 02 2277 1683
Fax 02 2277 1684



미국의 안보실행전략

이동선

고려대학교 교수

I. 서론

버락 오바마 Barack Obama 대통령의 취임은 미국인뿐 아니라 여러 나라의 국민들 사이에서 역사상의 일대 전환점으로 인식되며 큰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 새 지도자의 영도 하에서 앞으로 취하게 될 진로에 대한 관심은 미국의 선택이 국제체제에 미칠 정치 및 경제적 파장을 고려할 때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미국이 세계안보질서에서 차지하는 독보적인 위치로 인해 오바마 행정부 안보정책의 성격과 내용은 국제사회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에게 미국의 안보정책은 국가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 이 문제는 각별한 중요성을 지닌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정부의 안보전략에 나타나게 될 주요 특징들을 고찰해 보는 것은 큰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중요한 문제를 이해하는 실마리를 제공하기 위해 오바마 행정부가 채택할 안보실행전략(국가안보를 달성하기 위해 활용하는 정책수단)에 대해 전망해 보고자 한다.

논문의 핵심주장을 간단히 정리하면, 오바마 정부는 기본적으로 절제되고 균형 잡힌 안보전략을 채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사력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무력행사를 가급적 자제할 것이며, 민주주의의 확산과 가치동맹의 확대를 추구하는데 있어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이다. 이러한 현실주의적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국제제도와 경제원조 등의 자유주의적 외교정책수단의 활용도 아울러 적극적으로 추구할 것이다.

세간의 기대와는 달리, 오바마 행정부는 안보실행전략에 있어 부시 행정부 말기와 비교했을 때 급격한 단절을 택하지는 않을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2기에 들어서며 1기에 보였던 이상주의의 과잉 문제를 상당부분 극복하고 전략적 현실에 순응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오바마 정부도 전쟁과 경제위기 등 구조적 제약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급작스런 전략적



전환을 시도할 수 없을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초당파적 국정운영을 강조하며 공화당계 인사를 요직에 기용하는 것도 전략상의 연속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개선하기 위해 이 글은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첫 번째 절에서는 먼저 탈냉전기 미국이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활용해온 네 가지 실행전략에 대해 각기 살펴본 후에 이들 전략수단이 근래에 어떤 방식으로 배합되어 사용되고 있는지를 설명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두 번째 절에서는 향후 오바마 정부의 안보전략에 대해 전망해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핵심주장을 정리하고 한국의 국방정책 수립과 관련된 함의를 도출한다.

II. 탈냉전기 미국의 안보전략

1. 주요 개별실행전략

21세기 제반 안보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은 군사·외교·경제적 측면에서 다양한 전략수단(실행전략)을 활용해 왔다. 이러한 실행전략들은 크게 아래에 열거된 네 개의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The White House 2002, 1-2).¹ 두드러진 특징으로 미국정부는 민주주의 확산, 경제적 유대관계 확대, 국제제도의 확충 등 자유주의적 전략수단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군사력의 사용을 배제하지 않았을 뿐 더러 새로운 안보위협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군사변환(military transformation)을 통한 군사적 우위의 확보도 아울러 추진했다. 이 실행전략들은 안보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인 동시에 실천적 하위목표(과제)로서 기능했다.

(1) 민주주의 확산

냉전종식 이후 미국은 민주주의 확산의 전략적 중요성을 일관되게 강조했다. 특히 부시George W. Bush 행정부는 민주주의가 테러리즘의 발본색원과 강대국간 갈등의 예방과 해소 등 주요 안보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장기적 방안이라고 믿었다(The White House 2006, 3, 15, 36).² 이러한 판단은 민주주의 제도의 정치적 효과에 관한 여러 가정에 기반하고 있었다. 첫째로 민주주의 정치과정을 통해 민의가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반영되고 시민의 정치참여 기회가 확대됨으로써 정치적 불만이 해소되고 테러를 자행할 동기가 약화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주의 제도가 확산될수록 테러집단의 입지가 줄어들게 된다고 믿었다. 둘째로 민주주의 국가들은 서



로 전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민주정치제도의 확산은 안정적인 국제질서 구축에도 기여한다고 보았다(Doyle 1983). 이 같은 민주주의 확산전략은 이라크, 팔레스타인, 레바논 등지에서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고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되었다.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들로 구성된 “가치동맹”의 결성 및 확장도 아울러 도모해왔다(Bork 2005; Daalder and Lindsay 2004). 이러한 노력은 민주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사이에는 보다 긴밀한 협력이 가능하다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다(Gaubatz 1996; Lipson 2003; Reed 1997, 1072-1078).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는 굳건한 동맹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민주주의 제도의 전파는 미국주도의 동맹 네트워크를 강화 확장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 또 민주국가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민주주의 확산을 촉진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유럽에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를 확대하여 폴란드를 비롯한 여러 중동부 유럽 국가들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였고, 그루지야를 포함한 구소련 국가들을 새로 동맹에 편입하고자 시도했다. 한편 아시아에서는 한국, 일본, 호주와의 안보동맹을 공통의 가치에 기반을 둔 포괄적 동맹으로 변환하고자 노력하는 한편, 인도를 비롯한 기타 민주국가들과의 전략적 제휴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또 중동지역에서는 민주정치제도를 지닌 이스라엘과의 “특수한 관계”를 한층 더 공고히 해왔다(Mearsheimer and Walt 2007).

(2) 경제적 유대관계 확대

민주주의 확산과 더불어 미국은 무역 및 투자를 포함한 경제교류를 주요 외교정책수단으로 활용했다(The White House 2006, 25, 36). 그 일환으로 주요 동맹국 및 안보 파트너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공동의 경제이익을 확대 심화함으로써 정치적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노력해 왔다. 또 중국을 포함한 잠재적 경쟁국과도 경제적 유대관계를 증진함으로써 전략적 상호협력 가능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정치적 영향력의 증대를 도모했다. 이러한 노력은 경제적 상호의존이 증대될수록 정치적 불협화음이 수반할 경제적 비용이 증가하게 되어 안보협력의 유인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에 근거한 것이다(Keohane and Nye 1977; Polachek 1980, 55-78; Pappayanou 1999). 한편 북한과 이란 등 적대국에게는 경제제재와 함께 조건부 유인을 제시하여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려 하였다.

또 테러리즘을 비롯한 안보위협과 세계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불안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개발 원조를 활용했다(The White House 2006, 33). 개발 원조를 통해 경제적 번영을 가져오므로써 테러리즘을 촉발할 수 있는 빈곤상황을 완화하여 세계안보를 증진하고자 시도하는 한편, 경제적 불평등의 증대 등 세계화가 가져올 수 있는 여러 부정적 결과를 줄임으로써 세계 경제체제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노력도 기울였다.



(3) 국제제도 확충

여러 국제제도도 정책수단으로서 그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어 왔다. 특히 미국은 핵확산에 대처하기 위한 방편으로 핵비확산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의 보완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The White House 2006, 20).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제반 시설들은 군사적 목적으로 쉽게 전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라늄농축 및 핵연료재처리 시설은 민수용 전력발전뿐 아니라 군사용 핵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그런데 현재의 NPT는 이들 시설의 보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평화적 핵개발을 가장한 핵무장 위협에 취약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미국정부는 농축 및 재처리 시설 보유에 관한 강화된 규제조치를 도입하고자 노력해 왔다. 또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PSI) 등 핵 관련물질의 전파를 통제하기 위한 기제를 강화하고자 시도했다(The White House 2006, 48). 대량살상무기 관련물질의 국가 간 이동을 막기 위해 2003년에 발족한 PSI에는 현재 90여 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참여 국가의 수가 아직 비교적 적고, 중국 등 주요 핵보유국들이 불참하고 있으며, 법률적 강제성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며 반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제를 강화해왔다.

또한 미국은 자유무역의 확대와 세계경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등 다자간 국제기구와 자유무역협정 등의 양자협력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The White House 2006, 25, 30). 근래의 세계 경제위기의 여파로 이들 국제제도의 중요성은 한층 강조되어 왔다. 이러한 다자 및 양자 간 제도적 장치의 확충을 통해 전 세계적 경제변영을 달성하고 경제통합을 심화함으로써 테러리즘과 국제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다.

이렇듯 국익증진에 유용한 여러 국제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은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지닌 회원국들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자 했다. 일례로 국제연합을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 내에 민주주의 국가들의 협의체(Democracy Caucus)를 구성하려는 움직임을 들 수 있다.

(4) 군사적 우위 확보

위와 같은 자유주의적 정책수단뿐 아니라 군사적 수단도 미국의 안보전략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해 왔다. 미국정부는 잠재적 경쟁국의 도전을 막고 미국중심의 세계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군사력의 우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믿었다. 또 핵확산을 비롯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예방전쟁과 일방적 무력사용 등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이에 필요한 전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다(The White House 2006, 23, 37).³

아울러 새로운 안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미국은 군사력의 변환을 다각적으로 추진했다. 세계 각지에 고정 배치된 주둔군을 감축·재배치하는 한편, 구조개편을 통해 지상



군을 경량화하여 위기발생지역에 신속히 전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The U.S. Department of Defense 2005; Office of the Chairman of Joint Chiefs of Staff 2004). 또 공군의 장거리 정밀 타격 및 수송 능력을 제고하고 해군력을 확충하여 전력투사 능력을 증진하고자 노력했다. 그리고 지역분쟁에 개입할 때에는 공군력 및 해군력을 주로 활용하며 지상 전력은 역내 동맹국에 의존하는 “아프간 모델” Afghan Model을 적용하고자 했다(Biddle 2005/2006, 161-176).

이렇듯 업그레이드된 통상전력에 더하여 미국은 핵확산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핵전력을 장기적으로 개발하고자 하였다. 미군은 핵무기 및 통상무기를 이용한 정밀타격능력, 미사일 방어시스템 등 능동 및 수동적 방어체제, 예기치 못한 위협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방위 하부구조로 구성된 효과적인 핵전력 New Triad을 구축하여 새로운 안보환경에 대처하고자 했다. 하지만 동시에 핵무기가 군사전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줄어 왔다(Wirtz 2008, 111-133).⁴ 이는 냉전 종식 이후 강대국 간 전쟁위험의 감소와 핵 확산 위협에 따른 핵군축 노력의 필요성 증대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2. 실행전략의 배합

상기한 군사·외교·경제적 정책수단들은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여전히 중시되고 있다. 이는 힐러리 클린턴 Hilary Clinton 국무장관이 방위 defense, 외교 diplomacy 및 개발 development을 아우른 세 가지 실행전략 The Three Ds의 중요성을 강조한 데서도 나타난다. 이러한 전략 수단들은 미국이 당면한 위협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배합 사용되고 있으며, 새로운 안보상황의 전개에 따른 현실적 요구에 맞추어 그 상대적 비중이 재조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근래 정책수단의 활용에 있어 균형 balance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Campbell, Patel, and Singh 2008).

이라크 전쟁을 통해 민주주의 확산의 어려움과 부작용이 드러남에 따라 미국정부는 이 전략이 여러 심각한 과도기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시인하게 되었다. 민주주의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며 정치적 민주화가 단기적으로는 폭력과 분쟁을 악화시킬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민주주의 확산을 보다 점진적으로 신중하게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그루지야의 NATO 편입시도와 관련해 불거진 러시아와의 갈등도 미국의 가치동맹 확장시도가 지닌 잠재적 위험성을 드러냄으로써 보다 신중한 접근방식을 채택하도록 할 유인을 제공하였다(Cooper, Chivers, and Levy 2008).

또 군사적 수단이 갖는 한계가 이라크 전쟁을 통해 노정됨에 따라 미국은 무력행사에 있어 보다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무력으로 타국에 민주주의를 이식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상주의적 목적을 위한 군사력 사용을 자제하고 있다. 또 세계유일의 초강대국도 우



방의 도움 없이는 중요한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교훈을 얻게 됨으로써 일방적 무력행사를 피하고 있다.

아울러 군사력 변환의 한계와 문제점을 인식하고 점진적이고 균형 잡힌 군사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첨단장비를 갖춘 비교적 소수의 경무장 지상병력과 해공군력에만 의지해서는 이라크의 안정화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없었다는 사실은 도널드 럼스펠드(Donald Rumsfeld) 전 국방장관이 추진한 미군의 혁명적 재편구상이 지닌 허점을 여실히 드러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6년에 럼스펠드가 퇴진한 이후 로버트 게이츠(Robert Gates)를 비롯한 현실주의 성향의 민간인과 전통주의적인 직업군인들이 미 국방부의 정책결정을 주도하게 됨에 따라, 군사변환 개념에 기반을 둔 급진적 변혁 노력은 그 추동력을 잃었으며 보다 점진적이고 균형 잡힌 군 개편 노력이 이루어져 왔다(Gates 2009, 28-40). 예를 들어 비대칭적 분쟁 및 안정화 작전에 필수적인 비교적 낮은 기술수준의 장비들을 우선적으로 조달·배치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게이츠 장관이 유임됨으로써 이렇듯 균형 잡힌 전력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부시 행정부가 정권 초기에 간과했었던 대화와 협상, 국제제도와 통상관계 등의 정책수단의 중요성도 아울러 인식하고 안보전략에 있어 이 요소들의 비중을 점차 늘려가고 있다. 일례로 미국 핵전력의 축소와 전 지구적 비핵화를 추진하여 NPT와 관련 제도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 내고자 노력하고 있다(Sanger 2009a). 아울러 이란의 핵개발 저지 및 관계개선을 위한 직접 협상도 아울러 모색하고 있다(Spetalnick and Hafezi 2009). 또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충격으로부터 자유무역질서를 지탱하는 핵심적 국제제도를 보호하기 위해 G20 경제회의의 등을 통해 갖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한국 및 콜롬비아 등과의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하여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면서도 원칙적으로 체결을 지지하고 있다(Knowlton 2009).

III. 오바마 행정부의 안보전략 전망

오바마 정부의 안보전략은 미국이 직면한 구조적 현실과 주요 정치지도자들의 정책선호에 의해 주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오바마 정부는 구조적 제약 때문에 절제된 방위전략을 채택할 것이며, 동시에 정책결정자들의 이념적 선호로 인해 적극적인 외교와 개발을 추진할 것이다. 현재 미국 정부가 당면한 구조적 제약과 문제의 엄중함을 감안할 때 이 중에 전자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1. 절제된 방위

(1) 미국이 직면한 구조적 제약

오바마가 “변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대통령에 당선되기는 했지만, 단기적으로는 미국 안보정책에 급작스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점진적인 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군사 및 경제 분야에서 깊은 수렁에 빠져있는 미국이 진로를 급작스럽게 바꾸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쟁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당면 안보문제는 새 정부로서도 단기간에 쉽게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이라크에서 조금씩 철군할 경우 내전과 인도적 위기를 초래할 뿐 아니라, 이란에게 지역패권을 장악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분쟁을 촉발할 위험이 크다 (Baker and Hamilton 2006). 또 이라크를 테러집단의 온상으로 만드는 동시에 미국의 위신과 신뢰도에 크나큰 손상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이라크 전쟁에 비판적인 오바마 대통령조차도 그 해결방안에 있어서는 장기간에 걸친 단계적 철군계획을 제시하는 등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 (Obama 2009a; 2008).⁵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전황이 악화됨에 따라 조기 철군 대신 오히려 전투 병력의 증파를 추진하고 있다. 백악관은 해병 원정여단과 육군 스트라이커 여단 그리고 지원부대를 연내에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할 계획임을 지난 2월에 발표했다. 만연한 무능과 부패를 감안할 때 아프가니스탄 군대와 경찰이 독자적으로 효과적인 안정화 작전을 수행할 가능성이 매우 적기 때문에 미군의 주둔이 장기화될 개연성이 크다(Chivers 2009). 또 알카에다al Qaeda와 탈레반Taliban의 활동이 핵보유국인 파키스탄에서도 나날이 강화됨에 따라 이 지역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철군할 수 있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

오바마 행정부가 물려받은 미국의 경기침체와 세계경제위기도 단기적으로 해결하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들이다. 미국정부는 현재 이자율을 사상 최저수준으로 낮추며 은행권 및 주요 산업부문에 구제 금융을 제공하는 등 위기극복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이러한 방안들이 단기간에 큰 효과를 발휘하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 그동안 많은 정책수단을 소진했기 때문에 새 정부의 위기대처 능력도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개발을 돕고 있는 주요 인사들이 부시 행정부의 과오를 신랄히 비판하면서도 그 정책을 모두 뒤집는 소위 “anything but Bush” 노선을 추구하지 않을 것임을 반복적으로 공언한 것도 이 같은 상황판단과 무관하지 않다.

(2) 절제된 안보전략

상기한 제약에 직면한 오바마 정부는 안보이익을 추구하는 데 있어 보다 절제를 지향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부시 행정부 시절의 잇따른 정책실패로 인해 미국은 정치·군사·경제자원을 상당부분 소진한 상태이다.⁶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장기전의 결과 미군은 상당한 피로



감을 느끼고 있으며 미 정부와 국민들은 높은 군사비 부담에 힘겨워하고 있다. 현재까지 미국은 4천 명 이상의 사망자와 3만 명을 상회하는 부상자를 내었으며 1조 달러를 넘는 전비를 지출했다. 또 무역 및 재정적자에 따른 부채의 증가로 외교에 활용할 수 있는 경제자원도 줄어들었다. 그리고 과거의 패권주의적 외교정책으로 인해 미국의 매력과 외교적 영향력도 현저히 감소했다 (Armitage and Nye 2007). 앞서 말한 구조적 문제들을 단기간에 해결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아우른 국력의 총체적 감소에 따라 미 행정부는 전략적 절제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세계질서를 미국이 바라는 모습으로 적극적으로 변환하려고 시도하기보다는 당면한 구조적 현실에 순응하려는 노력이 상대적으로 강화될 것이다.

우선 오바마 정부는 군사력의 활용, 특히 선제공격 및 예방전쟁 등 공격적 군사전략의 사용을 가급적 자제할 것이다. 특히 민주주의의 확산 등 불요불급한 이상주의적 프로젝트를 실현하고자 군사력을 사용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이다. 새로운 대규모 군사작전을 수행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오바마 정부가 군사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999년에 클린턴 행정부가 세르비아를 공습했을 때와 같이 비교적 약한 적에 대해 제한된 공군력을 사용하는 데 그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제외한 지역에 대규모의 지상군을 새로 투입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것이 오바마 정부가 군사력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포기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과 북한 등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외교적 수단을 주로 사용하되 군사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선거기간 동안 누차 피력해 왔다. 하지만 이들 국가들에 무력을 사용할 경우 막대한 피해와 비용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실제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매우 적다(Lee 2008, 135-143). 특히 북한의 경우, 소규모의 공습조차도 전면전으로 확대될 위험이 있고, 이로 인해 미국과 동북아시아의 우방들이 직간접적으로 입게 될 인적 및 물적 피해가 크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과거 클린턴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 모두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을 자제했다. 현재 북한이 강화된 핵전력을 보유하게 됨에 따라 군사력 사용이 수반하는 위험은 더욱 커졌다. 또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의 강력한 반대도 미국의 무력행사를 어렵게 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와 비교했을 때 오바마 정부는 민주주의 확산과 가치동맹의 확대를 보다 신중히 추진할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가장 큰 당면과제 중 하나인 핵확산 방지를 위해 핵 관련 시설 및 물질에 대한 보안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히 러시아의 협력이 필수적인데, 그루지야 등을 나토NATO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면서 러시아를 자극하는 것은 목표달성에 방해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오바마 정부는 나토NATO 확장과 관련해 보다 신중한 입장을 견지할 것이다. 아울러 PSI를 비롯한 반확산 체제를 강화하고 경제위기와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칫 중국 포위 노력으로 비칠 수 있는 아시아 지역에서의 민주동맹 구축노력도 보다 조심스럽게 추진할 가능



성이 크다. 또 이들 강대국으로부터 협조를 구하기 위해 민주주의 확산과 관련된 레토릭(rhetoric) 뿐 아니라 실질적 노력도 상당부분 줄일 것이다.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린턴 국무장관의 인사청문회 발언이나 6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 성명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동맹정책에 있어 가치의 중요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을 것이다.⁸

또 오바마 정부는 일방주의적 행동을 자제하고 다자외교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는 타국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이끌어간다(listen and lead)는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구호에도 뚜렷이 나타난다(The Christian Science Monitor 2009). 이념적으로 다자주의를 선호할 뿐 아니라 주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 및 군사적 부담을 홀로 감당할 능력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전통적 동맹국과의 공조도 그 중요성이 강조될 것이며 동맹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려는 시도도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오바마 정부가 일방주의를 무조건적으로 배척할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 우선 필요한 경우에는 일방주의 안보전략을 채택할 수 있음을 오바마 대통령 자신이 누차 공언해 왔다. 특히 대선공약대로 이란 등 문제당사국과 직접대화에 나서면서 관련국가의 의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도 있다. 과거 클린턴 행정부도 대인지뢰와 북한 핵개발을 비롯한 몇 가지 이슈와 관련해 종종 일방주의적 입장을 취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오바마 정부는 자유무역을 통한 경제적 유대관계의 심화도 보다 신중히 추구할 것이다. 국내 경제사정이 어려운 한 전략적 이득만을 얻기 위해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경제교류를 확대하는 것을 피할 것이다. 또 국내 특수이익집단에 의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는 의회가 반자유무역 로비 때문에 경제교류의 확대를 방해하고 나설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정책기조가 보호무역주의로 전면적으로 선회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클린턴 행정부처럼 초기에는 자동차 등 특정산업분야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여 공정한 무역을 강조하며 한국 등 주요교역국에 어느 정도 통상압력을 가하겠지만 자유무역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자유무역을 원하는 여러 경제부문의 요구도 무시하기 어려우며, 무엇보다 자유무역이 경제전반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례로 한미자유무역협정이 미국의 경제성장을 촉진할 것이라는 많은 연구결과가 나와 있다(Cooper, et al. 2007; U.S. Department of State 2008; Schott, Bradford, and Moll 2006; Lee and Lee 2005). 현재 미국의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경제성장의 기회를 흘려보내기는 정치적으로도 매우 부담스러울 것이다.

미국은 절제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세계 각지에 대한 개입과 방위공약을 줄이고 제한적으로 철수(retrenchment)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Mearsheimer 2001a, 46-61). 이에 따라 민주주의 등 자유주의적 가치를 전 세계에 확산하려는 노력이나 군사력의 절대적 우위를 추구하려는 시도는 뚜렷이 퇴조할 것이다. 하지만 외교정책 엘리트들 사이에 국제주의 사조가 이미 깊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미국이 19세기식 고립주의로 급작스럽게 회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⁹ 새로운 외교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오바마 대통령도 이라크에서의 실패에 따른 고립주의의 대두를 경계하며 미국이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역설해 왔다 (Obama 2007, 2-16). 그러므로 고립주의보다는 현실주의자들이 선호하는 보다 온건한 전략적 대안인 역외 균형전략offshore balancing 또는 선택적 개입전략selective engagement에 자유주의적 요소가 일정 정도 가미된 형태의 절제된 안보전략이 장기적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전자는 지상군 활용을 최소화하며 유럽, 동아시아, 중동 등 세계주요지역에 지역패권국가가 등장하는 것을 방지하는 전략을 말하며, 후자는 제한된 군사력을 주요지역에 주둔하며 강대국 간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Layne 1997, 86-124; Mearsheimer 2001b; Art 2003). 이 중 어떤 전략이 채택되든지 장기적으로 동아시아를 비롯한 세계각지에 배치된 미 지상군이 감축될 가능성이 크다.¹⁰ 또한 미국의 역할도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2. 적극적 외교

(1)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선호

중대한 구조 및 상황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정책결정자의 선호와 의지가 안보정책에 여전히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력의 감퇴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당분간 세계유일의 초강대국으로 남을 것이므로 상당한 정도의 행동의 자유를 여전히 향유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오바마 대통령이 선거에서 압승했고 민주당이 의회 상하 양원을 함께 장악했기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국내정치적 제약도 상대적으로 약할 것이다.

오바마 정부에는 자유주의 성향을 띤 인사들이 많이 포진해 있다. 연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자유주의적 가치를 신봉하고 있다(Obama 2009b).¹¹ 외교안보 문제에 관한 오바마 대통령의 개인적 경험이 적기 때문에 내각 및 참모진이 정책결정에 있어 비교적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인데, 현재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안보 실무진과 자문단에는 힐러리 클린턴Hilary clinton 국무장관을 위시해 자유주의적 성향의 인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¹² 그리고 이들 중 상당수는 클린턴 행정부에 관여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오바마 정부의 정책은 과거 클린턴 안보정책이 지녔던 성격과 유사한 자유주의적 성향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이는 오바마 정부가 안보를 추구하는 데 있어 외교와 개발을 가급적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할 것임을 의미한다.

(2) 적극적 외교와 개발

오바마 정부는 핵확산 문제에 대처함에 있어 대선공약대로 이란 등 당사국과 전제조건 없는 직



접 외교교섭에 나서려 할 것이다. 핵확산의 위험과 직접 외교협상의 효과를 함께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Obama 2009c). 이러한 외교적 노력은 부시 행정부가 6자 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에 제동을 건 것처럼 초기에 일정 정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협상이 진행되면서 핵 프로그램의 완전해체와 검증 문제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 핵 문제의 경우, 미국과 북한을 비롯한 관련 당사국들이 2005년 9월에 합의한 공동의 목표를 추구할 의향을 가지고 있더라도 깊은 상호불신 때문에 목표를 실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2009년 4월에 있었던 북한의 로켓 발사와 5월에 이어진 핵실험을 계기로 촉발된 6자 회담의 좌초위기는 당사국들 사이에 존재하는 깊은 불신의 골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현재 북한은 핵무장 의지를 피력하고 6자 회담 무용론을 펴고 있으며, 미국은 이에 맞서 강력한 제재조치를 강구하고 있다.¹³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북한 간의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편 이란도 미국에 대한 위협인식과 불신 때문에 오바마 정부의 외교적 해결노력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기를 주저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도 이란의 의도를 불신하고 있으므로 우라늄농축 및 핵연료 재처리 시설의 자체 보유를 용인하기 어려울 것이다(Sanger 2009b). 6월에 치러진 이란의 대통령 선거를 둘러싸고 불거진 양국의 반목도 성공적인 외교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렇듯 외교적 해결노력이 증대한 장애물에 부딪쳐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공화당이 오바마를 유회주의자로 몰아세우며 정치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크다. 또 전통적으로 반핵 반확산을 중요한 외교정책 목표로 지지해온 민주당도 경제제재 등 강경대응을 요구하고 나올 수도 있다. 이러한 정치적 압력에 직면한 오바마 행정부는 이란과 북한에 대해 강경 전략으로 선회할 수 있다.

또한 오바마 정부는 조약위반 시 자동제재조치와 우라늄농축 및 핵연료 재처리 시설의 보유 제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NPT체제 강화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omprehensive Test Ban Treaty)과 핵 물질 감축안(Fissile Material Cutoff Treaty)도 지지할 것이다. 오바마 정부가 핵 비확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아울러 국제제도의 활용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성공을 거두리라 낙관하기는 어렵다. 우선 안보불안이 해소되지 않는 한 많은 국가들이 핵무장 옵션을 완전히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라늄농축과 핵연료재처리 능력을 보유할 권리를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또 에너지안보가 중요해지는 시대에 다수의 국가들이 핵연료 공급을 타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상황을 피하고자 할 것이다. 그리고 핵에너지의 평화적 사용은 핵무기 미보유 국가들이 NPT를 체결할 때 핵무장 포기의 반대급부로서 약속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권리의 제한을 상응하는 보상 없이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으려 할 것이다. 현재의 NPT가 다수의 회원국들에게 비핵화의 의무만 지우는 불평등조약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음을 고려할 때, 이 제도를 강화하려는 시도에는 상당한 정치적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힐러리 클린턴(Hilary Clinton) 국무장관을 비롯한 주요 행정부 관리들이 여러 차례 천명했듯이 오바마 행정부는 정책수단으로써의 개발원조의 중요성도 강조할 것이다(Clinton 2009). 저발전과 빈곤이 테러리즘의 근본적인 원인인 동시에 세계 경제안정에 대한 위협요인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전략을 사용하는 데 있어 현실적 한계에 부딪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미국이 경기침체와 쌍둥이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가용한 경제자원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다. 또 정부지출 팽창에 대한 미국 국민의 우려 때문에 원조 프로그램의 확대는 정치적으로도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물질적인 경제원조보다는 개발 노하우 및 제도의 전파에 주력하며 원조수혜국들 스스로의 책임성과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Obama 2009d).¹⁴ 하지만 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날 이러한 유형의 지원에 대해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한 원조수혜국이 얼마나 긍정적으로 반응할 지가 의문이다.

IV. 결론

지금까지 오바마 행정부의 안보전략에 나타나게 될 주요 특징들에 관해 전망해 보았다. 오바마 행정부는 구조적 제약을 직시하고 단기적으로 전략적 절제를 추구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세계 각지로부터의 제한적 철수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실주의적 정책기조를 근간으로 국제제도와 경제협력 등 자유주의적 전략수단의 사용을 가능한 늘려가며 세계정치에서의 미국의 리더십을 유지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중요한 변화이지만 과거와의 급작스러운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부시 행정부 말기에 들어 이미 나타나고 있었던 추세가 한층 강화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진단일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연속성은 크게 두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 우선 부시 행정부 2기와 새 행정부는 이라크 전쟁과 경제위기 등 기본적으로 동일한 구조적 제약에 직면하고 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한 오바마 행정부의 진로선택의 폭은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또 정책결정자의 선호 면에서도 연속성이 나타난다. 오바마 대통령은 위기극복을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초당파적 내각을 구성하고자 노력해 왔고, 게이츠 등 현실주의적 성향의 공화당계 인사들을 중용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안보정책에 있어 급격한 단절이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Foreign Policy 2008, 50-56).

이러한 분석결과는 한국 안보정책 수립과 관련해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앞서 밝혔듯이, 중대한 군사 및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오바마 행정부는 절제된 안보전략을 추구하는 한



편 외교적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 정책의 일환으로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우방국으로부터 더 큰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한국에게는 동아시아 지역안보에 있어 보다 큰 역할을 수행해 줄뿐 아니라 아프가니스탄 전쟁 및 재건노력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바랄 것이다. 그런데 미국의 당면문제들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기대에 효과적으로 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미국의 정책을 장기적으로 지원할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미국의 요청이 일시적일 것으로 가정하고 선불리 증대한 지원을 약속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가 될 것이다. 차후에 국민적 동의가 확보되지 못하거나 국가적 여력이 부족해 지원을 조기에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될 경우, 오히려 실망감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가이익과 능력에 대한 냉철한 계산과 국민적 합의의 도출을 위한 노력을 통해 현실적으로 지원 가능한 부분만을 약속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단순히 “전략동맹”과 같은 매력적인 정책구호나 동맹관계의 복원 및 강화를 향한 열정에 이끌려 지키지 못할 과도한 약속을 하는 것은 한국의 안보에 있어 절대적 중요성을 지닌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위험을 장기적으로 초래할 수 있다.

전략적 절제를 지향하는 오바마 정부는 한국뿐 아니라 일본과 중국 등 주요국가로부터도 지역 및 세계안보에 있어 증대된 역할과 리더십을 요청할 것이다. 이에 따라 미일동맹 강화와 미중 전략파트너십의 구축을 위한 노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들 국가들이 한국과 일부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그들의 역할과 영향력 증대는 한국에게 반드시 득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미국이 동아시아로부터 제한적으로 철수함에 따라 생겨난 힘의 공백을 지역강국인 일본과 중국이 채우는 것을 한국의 힘만으로 막을 수는 없다. 따라서 이들의 역할증대를 단순히 비판하며 불필요한 마찰을 불러일으키기 보다는 불가피한 현실을 수용하면서 한국의 국익이 새로운 동아시아 안보질서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힘쓰는 것이 현명한 대응이 될 것이다. ■



주(註)

¹ 일례로 부시 행정부가 설정한 안보목표는 정치 및 경제적 자유, 국제평화, 인간존엄성의 실현이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채택한 8개의 전략수단들도 역시 아래의 네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²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ashington, D.C.: The White House, 2006, 3, 15, 36). 차후에 인용한 *National Security Strategy*는 모두 2006년판임을 밝혀둔다.

³ 이는 2002년 공표된 소위 “부시 독트린”의 핵심내용이었다.

⁴ 한편 이에 관한 이견도 존재한다. Keir A. Lieber and Daryl G. Press, “The End of MAD? The Nuclear Dimension of U.S. Primacy,” *International Security* Vol.30, No.4 (Spring 2006, 7-44).

⁵ 백악관은 2010년 8월 말까지 점진적으로 전투 병력을 철수하겠다고 밝혔다.

⁶ 이에 따라 미국이 쇠퇴하고 있는가에 관한 논쟁이 일고 있다. Robert A. Pape, “Empire Falls,” *The National Interest* (January/February 2009, 21-34); Stephen M. Walt, “Is the Unipolar Era Over?” *Foreign Policy*, Available at http://walt.foreignpolicy.com/posts/2009/01/22/is_the_unipolar_era_over?.

⁷ 이와 관련해 러시아와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미사일방어체제 개발·배치도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Dmitri A. Medvedev 러시아 대통령에 보낸 친서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동유럽에 미사일방어체제를 배치하려는 계획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의향을 피력했다. Peter Baker, “Obama Offered Deal to Russia in Secret Letter,” *The New York Times*, March 3, 2009. 또 같은 이유로 이 국가들에 대한 인권개선 압력도 자제할 것이다. 실제로 미국 정부고위관리들은 중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Adriana Eunjung Cha and Glenn Kessler, “Pelosi Mum on Rights Before Trip to China,” *The Washington Post*, May 24, 2009.



⁸ <http://thepage.time.com/clintons-confirmation-hearing-prepared-statement> (검색일: 2009, 5, 21); <http://www.mofat.go.kr/state/areadiplomacy/northamerica/index.jsp> (검색일: 2009, 7, 3)

⁹ 이러한 국제주의적 성향은 다양한 미국 외교관련 정책연구소들이 출간한 보고서를 살펴보면 뚜렷이 드러난다. Ralph A. Cossa, Brad Glosserman, Michael A. McDevitt, Nirav Patel, James Przystup, and Brad Roberts, *The United States and the Asia-Pacific Region: Security Strategy for the Obama Administration* (Washington, D.C.: Center for a New American Century, 2009); Gayle E. Smith, *In Search of Sustainable Security: Linking National Security, Human Security, and Collective Security to Protect America and Our World* (Washington, D.C.: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2008); *A Plan for Action: A New Era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a Changed World* (Washington, D.C.: Managing Global Insecurity, 2008).

¹⁰ 오바마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에 6만 5천 명의 육군병력과 2만 7천 명의 해병대원을 증원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 미군이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할 임무에 비해 병력의 수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군의 책임을 줄어나갈 것이며 이에 따라 지상군 규모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다.

¹¹ 최근의 대표적 예로 대테러정책에 있어 가치의 중요성을 역설한 것 들 수 있다.

¹² 대표적인 예로 국무부 정책기획국장인 앤-매리 슬로터 Anne-Marie Slaughter를 들 수 있다. 그가 프린스턴 대학교에 재직 중 낸 저작들은 민주주의 확산과 국제제도 강화를 지지하는 등 자유주의적 성향을 매우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G. John Ikenberry and Anne-Marie Slaughter, *Forging A World of Liberty Under Law: U.S. National Security in the 21 st Century* (Princeton, N.J.: The Woodrow Wilson School of Public and International Affairs, 2006).

¹³ 하지만 양국 정부가 외교적 타협을 전적으로 포기한 것은 아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미국은 북한에게 제시할 비핵화를 위한 인센티브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으며, 북한도 미국과의 양자협상을 희망하고 있다. James Rosen, "Obama Administration Preparing Incentives Package for North Korea," *FOX News*, July 21, 2009, Available at <http://www.foxnews.com/politics/2009>



/07/21/obama-administration-readying-new-north-korea-package/; Sang-Hun Choe, “N. Korea Says It’s Open to Dialogue on Its Weapons,” *The New York Times*, July 28, 2009.

¹⁴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가나에서 행한 연설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참고문헌

- Armitage, Richard L. and Joseph S. Nye, Jr. 2007. *CSIS Commission on Smart Power: A Smarter, More Secure America*. Washington, D.C.: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 Art, Robert J. A. 2003. *Grand Strategy for America*.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 Baker, James A. III and Lee H. Hamilton. 2006. *The Iraq Study Group Report: The Way Forward—A New Approach*. Washington, D.C.: The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 Baker, Peter. 2009. “Obama Offered Deal to Russia in Secret Letter.” *The New York Times* March 3.
- Biddle, Stephen D. 2005/2006. “Allies, Air Power, and Modern Warfare: The Afghan Model in Afghanistan and Iraq.” *International Security* Vol.30, No.3(Winter).
- Bork, Ellen. 2005. “Asia Awaits America’s Vision for Cooperation.” *The Financial Times* July 29.
- Campbell, Kirt M. Nirav Patel, and Vikram J. Singh. 2008. *The Power of Balance: America in Asia*. Washington, D.C.: Center for a New American Century.
- Cha, Adriana Eunjung, and Glenn Kessler. 2009. “Pelosi Mum on Rights Before Trip to China.” *The Washington Post* May 24
- Chivers, C. J. 2009. “Arms Sent by U.S. May Be Falling Into Taliban Hands.” *The New York Times* May 20
- Choe, Sang-Hun. 2009. “N. Korea Says It’s Open to Dialogue on Its Weapons.” *The New York Times* July 28.
- Clinton, Hillary Rodham. 2009. “Clinton’s Confirmation Hearing Prepared Statement” Available at <http://thepage.time.com/clinton-confirmation-hearing-prepared-statement>.



- _____. 2009. Transcript of Remarks by Secretary of State Hillary Rodham Clinton, July 15.
- Cooper, Helene. C.J. Chivers, and Clifford J. Levy. 2008. "U.S. Watched as a Squable Turned into a Showdown." *The New York Times* August 18.
- Cooper, William H. et al. 2007. "The Proposed U.S.-South Korea Free Trade Agreement (KORUS FTA): Provisions and Implications." *CRS Report for Congress RL34330* April.
- Cossa, Ralph A. Brad Glosserman, Michael A. McDevitt, Nirav Patel, James Przystup, and Brad Roberts. 2009. *The United States and the Asia-Pacific Region: Security Strategy for the Obama Administration*. Washington, D.C.: Center for a New American Century.
- Daalder, Ivo H. and James M. Lindsay. 2004. "An Alliance of Democracies." *The Washington Post* May 23.
- Doyle, Michael W. 1983. "Kant, Liberal Legacies, and Foreign Affairs,"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Vol.12, No.3&4(Summer and Fall).
- Foreign Policy. 2008. "The Dream Team." *Foreign Policy* Issue.163(November/December).
- Gates, Robert M. 2009. "A Balanced Strategy: Reprogramming the Pentagon for a New Age," *Foreign Affairs* Vol.88, No.1(January/February).
- Gaubatz, Kurt Taylor. 1996. "Democratic States and Commitment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50, No.1(January).
- Ikenberry, G. John and Anne-Marie Slaughter. 2006. *Forging A World of Liberty Under Law: U.S. National Security in the 21st Century*. Princeton, N.J.: The Woodrow Wilson School of Public and International Affairs.
- Keohane, Robert O. and Joseph S. Nye. 1977. *Power and Interdependence: World Politics in Transition*. Boston, M.A.: Little & Brown.
- Knowlton, Brian. 2009. "U.S. Trade Chief Says Obama Will Push Ahead on Pacts." *The New York Times* April 24.
- Layne, Christopher. 1997. "From Preponderance to Offshore Balancing: America's Future Grand Strategy," *International Security* Vol.22, No.1(Summer).
- Lee, Dong Sun. 2008. *Power Shifts, Strategy, and War: Declining States and International Conflict*. London: Routledge.
- Lee, JunKyu and Hongshik Lee. 2005. "Feasibility and Economic Effects of a Korea-U.S. FTA." In *NRCS Joint Research Series on FTA Issues* 05-05-02. Seoul: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 Lieber, Keir A. and Daryl G. Press. 2006. "The End of MAD? The Nuclear Dimension of U.S.



- Primacy,” *International Security* Vol.30, No.4(Spring).
- Lipson, Charles. 2003. *Reliable Partners: How Democracies Have Made a Separate Peac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Managing Global Insecurity, 2008 *A Plan for Action: A New Era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a Changed World*.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 Mearsheimer, John J. 2001a. “The Future of American Pacifier,” *Foreign Affairs* Vol.80, No.5 (September/October).
- _____. 2001b.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 Mearsheimer, John J. and Stephen M. Walt. 2007. *The Israel Lobby and U.S. Foreign Policy*.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 Obama, Barack. 2007. “Renewing American Leadership,” *Foreign Affairs* Vol.86, No.4(July/August).
- _____. 2008. “My Plan for Iraq,” *The New York Times* July 14.
- _____. 2009a. “Responsibly Ending the War in Iraq,” Remarks by President Barack Obama, Camp Lejeune. U.S.A. February 27.
- _____. 2009b. Transcript of Remarks by the President on National Security, May 21.
- _____. 2009c. Transcript of President Barack Obama’s News Conference, April 29.
- _____. 2009d. Transcript of President Barack Obama’s Speech in Ghana, July 11.
- Office of the Chairman of Joint Chiefs of Staff. 2004. *The National Militar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ashington, D.C.: The White House.
- Papayoanou, Paul A. 1999. *Power Ties: Economic Interdependence, Balancing, and War*.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Pape, Robert A. 2009. “Empire Falls,” *The National Interest* (January/February).
- Polachek, Solomon W. 1980. “Conflict and Trad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24, No.1(March).
- Reed, William. 1997. “Alliance Duration and Democracy,”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41, No.3(July).
- Rosen, James. 2009. “Obama Administration Preparing Incentives Package for North Korea,” *FOX News* July 21, Available at <http://www.foxnews.com/politics/2009/07/21/obama-administration-readying-new-north-korea-package/>.
- Russet, Bruce. *Grasping the Democratic Peac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anger, David E. 2009a. “Hints of Obama’s Strategy in a Telling 8 Days,” *The New York Times*



- April 8.
- _____. 2009b. "Clinton Says Nuclear Aim of Iran Is Fruitless," *The New York Times* July 27.
- Schott, Jeffrey J. Scott C. Bradford, and Thomas Moll. 2006. "Negotiating the Korea-United States Free Trade Agreement," *Policy Briefs in International Economics* No. PB06-4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June.
- Smith, Gayle E. 2008. *In Search of Sustainable Security: Linking National Security, Human Security, and Collective Security to Protect America and Our World*. Washington, D.C.: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 Spetalnick, Matt and Parisa Hafezi. 2009. "Obama Offers New Start with Iran," *Reuters* March 21.
- The Christian Science Monitor. 2009. "Obama's Foreign-Policy Credo: Listen and Lead," *The Christian Science Monitor* March 31.
- The White House. 2002.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ashington, D.C.: The White House.
- _____. 2006.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ashington, D.C.: The White House.
- U.S Department of Defense. 2005. *Facing the Future: Meeting the Threats and Challenges of the 21st Century*.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Defense.
- U.S. Department of State. 2008. "The Case for the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Strengthening Partnerships for Prosperity." Washington, D.C.: Bureau of Economic, Energy, and Business Affairs.
- Walt, Stephen M. 2009. "Is the Unipolar Era Over?" *Foreign Policy*, Available at http://walt.foreignpolicy.com/posts/2009/01/22/is_the_unipolar_era_over? (검색일: 2009, 1, 2).
- Wirtz, James J. 2008. "United States: Nuclear Policy at a Crossroads." In *The Long Shadow: Nuclear Weapons and Security in 21st Century Asia*, ed. Muthiah Alagappa.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필자약력

현재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시카고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미국소재 East-West Center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국제안보와 국제관계 이론이다. 저서로는 *Power Shifts, Strategy, and War* (Routledge, 2008)가 있으며, 최근의 주요 학술논문으로는 “A Nuclear North Korea and the Stability of East Asia” (*Austra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2007)와 “Democratization and Alliance Policy”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2007) 등이 있다.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지식 네트워크

- 동아시아연구원(EAI)은 미국 맥아더재단(MacArthur Foundation)의 '아시아안보이니셔티브'(Asia Security Initiative) 프로그램 핵심 연구기관으로 선정되어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안보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 및 정책 개발을 위해 2009년1월 아시아안보연구소(소장: 전재성 서울대)를 설립하였습니다.
- 본 연구 보고서는 아시아안보센터의 연구 결과물로서 정책결정 및 학술연구, 각종 교육 사업에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보고서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인용할 시에는 출처와 저자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보고서는 동아시아연구원 홈페이지 [EAI 출판]과 각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문의는 아래로 연락해 주십시오.
김하정 아시아안보센터 선임연구원 Tel. 02 2277 1683 (내선 107) hjkim@eai.or.kr
최은혜 아시아안보센터 연구원 Tel. 02 2277 1683 (내선 130) ehchoi@eai.or.kr

